§§

産業環境情報

-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기반확충 -

하 성 훈 현대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

(註 : 상공회의소의 산업환경정보 게재 자료인용)

Ⅰ. 자율환경관리의 등장 배경

새로운 천년을 앞둔 지금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선진국들이 경제발전 패턴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뒤따라 좇는 기러기형 모델(Flying Geese Model)은 더 이상 새 천년 한국경제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새 천년에는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여 새롭게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규범인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 또는 기업경영'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환경정책과 기업의 대응자세에 있어서도 기존 규제중심의 일방적인 환경관리체제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정책 또는 경영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 규제중심의 환경관리에서 탈피해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정부, 기업, 민간부문이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하거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형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비용 및 자원분배의 효율성 제고에 근거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직업·국가·지구 차원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와 공동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사전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과 기반확충은 새 천년의 기업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며 기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법규 위반 및 관리비용의 절감
·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새로운 기술 및 관리기법의 도입
· 환경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력과 파트너쉽의 강화

Ⅱ. 자율환경관리 기반확충을 위한 주요과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제도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근거한 성과지향적인 제도라는 기본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도의 기반확충을 위한 과제로 목표 설정, 대상분야, 법률적 성격, 기업참여 형태, 인센티브,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등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목표설정

자율환경관리의 기반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본 제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국내 여건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목표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주요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요인이 된다. 따라서 제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체계, 문화, 경제수준, 기업여건과 중장기 환경정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율환경관리 대상분야 선정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대상은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같은 특정분야에서부터 환경정책의 전체 분야까지 광범위하다. 유럽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나 폐기물 등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반적인 환경분야를 대상으로 기업참여와 파트너쉽을 통

§§

한 자율환경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기반확충을 위한 대상분야의 선정시에는 기존의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방향이나 규제내용에 대한 조정 없이 일방적인 제도 도입은 새로운 규제로 흘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도의 법률적 성격

제도의 법률적 성격은 참여하는 기업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법적 구속령을 가지거나 사전규제의 성격이 강한 협약형태는 참여에 강한 동기를 제공하여 기업의 의무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규제의 성격이 약한 파트너쉽 프로그램 형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 내용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과 관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성과공개나 보고 등 시장에 의한 모니터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기업의 참여 형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 형태는 산업계 협회 중심의 참여와 기업단위의 개별참여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제도의 기반확충을 위해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산업계 협회가 중심이 되어 개별기업의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때 개별기업은 소속된 협회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협회의 참여가 결정된 뒤 개별기업의 참여는 여건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제도의 정착단계가 되면 행정기관 또는 전담기구와 개별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직접적인 인센티브 유형으로 세금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경제적 지원이 있으며, 간접적인 인센티브 유형으로 각종 행정서비스 및 정보제공, 기술지원 등이 있다.

국내에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

색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참여 기업에게는 기존 의무사항이나 규제절차에 대해 과감한 면제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중의 하나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진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별기업 중심의 참여제도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업종별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을 계열화하여 산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한 자발적 참여의 유도와 규제강화를 통한 의무적인 참여의 유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대상, 목표 및 성격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겠지만 제도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나 차별수단으로 운영되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이다.

Ⅲ. 자율환경관리를 위한 기업의 실천수단

1. 자발적 협약을 통한 기반 마련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수단으로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이 있다. 자발적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스스로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충족시키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한 기업에게는 기업의 고유한 경제 · 사회 · 정치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환경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유연성을 준다.

예를 들면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특정 기업은 스스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과금 면제나 기술자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2. 환경경영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자율환경관리가 국내나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한 규범이라면 기업 환경경영의 국제표준화는 세계를 기준으로 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환경경영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국제표준화 경향이 강조되고 있는데 ISO 14001로 알려진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의 국제규격 인증이 대표적이다. 특히 환경경영 국제규격의 범위가 환경라벨링, 환경성과평가, 전과정평가, 부지환경평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인증취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 기업들도 ISO와 같은 환경경영의 국제표준인증을 계기로 자율환경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 환경정보에 대한 대외 공개

새 천년에는 기업의 투명성이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환경분야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며, 그 일환으로 기업의 환경성과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즉 기업은 설정한 환경목표에 대해 실적과 성과를 주주, 지역주민, 종업원과 정부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기업의 환경보고서나 성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시민단체나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나갈 수 있다.

Ⅳ. 정책 제안

국내 환경정책 방향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율환경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어 21세기에는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화와 투명성이라는 명제에 의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위주의 " 자율환경관리 온라인 서비스 창구 "의 개설

§§§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운영은 참여자 위주의 인터페이스가 갖추어진 온라인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는 인터넷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류업무 대체로 인한 경비절감 효과뿐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한 업무효율과 서비스 개선

자율환경관리제도는 철저하게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참여자의 모든 업무에 e-mail을 도입하여 복잡한 서류처리 과정을 없애고 참여기업, 협회 및 감독기관은 공유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자율환경관리 업무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 문서 양식을 단일화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번거로운 서류 절차가 필요 없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같은 업무의 디지털 프로세스화는 환경행정 업무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성과에 대한 대외 공개 원칙의 수립

자율환경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실적이나 제도의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 알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환경행정과 관련 업무의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와 같은 제조적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성과에 대한 대외공개 원칙은 참여 기업에게 능동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따라 향후에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정보에 대한 보고와 대외 공개에서도 일률적인 공개보다는 개별 기업의 기업비밀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공개 방식과 연도별 성과공개를 통한 개선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